

#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078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1월 2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### 2. 제안이유

- 자치구에 시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,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새롭게 분장함으로써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5조 제1항의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(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,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89개소)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함(안 별표 □ 시민건강국).
- 나.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물류정책과로 업무 변경함(안 별표 □ 도시교통실).
- 다. 도시계획과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 변경함(안 별표 □ 균형발전본부).

라. 물재생계획과 일부 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 변경함

(안 별표 □ 물순환안전국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단속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##### 나. 서울시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의 위임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은 국회,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사, 학교, 보건소,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(제9조 제4항)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제9조 제7항)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」(이하 “금연조례”)를 통해 도시공원,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, 중앙차로 버스정류소, 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(10만원 이하)를 부과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1,954개소로, 이중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의 단속권한은 2016년 시장방침(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계획)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되었고, 도시공원은 금연조례(제11조)<sup>1)</sup>에

따라 공원녹지사업소로 단속권한이 위임되었으나, 「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」에는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음.

### <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>

연번	구 분	개소수	최초 지정일	단속주체
1	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	3	'11.3.	서울시
2	버스정류소(중앙차로)	389	'11.12.	
3	도시공원	24	'11.9.	공원녹지사업소(위임)
4	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	1,538	'16.5.	관할 자치구 (위임)
합 계		1,954		

- 서울시는 현재 금연구역 중 중앙차로 버스정류소, 서울·청계·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만 단속반을 운영 중이며, 정책방향을 단속 규제보다 사전예방과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단속인력을 감축하고(2020년 10명→2021년 1명)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임(2021년 546만원).
- 한편, 25개 자치구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(총 288,961개, 법 271,885개·조례 17,076개)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(2021년말 기준 단속실적 35,205회, 단속인력 397명).
- 개정안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으로, 금연구역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흡연행위 단속과 계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.

1)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(사무의 위임)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- 다만, 도시공원의 경우는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별도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이 필요함.

**<수정의견 조문대비표>**

<b>개정안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건강국			
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	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	구청장
<b>수정의견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시민건강국			
	주관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	보건의료 정책과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	건강증진과	1.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(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)	○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 제4호	구청장

- 한편, 사무위임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는 위임되는 금연구역이 소규모 (광장 3개소, 버스정류장 392개소)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자치구의 기존 단속인력을 활용하기로 협의되었음.

-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(2021.9.15.~9.17)에 따르면, 25개 자치구 모두 사무위임에 찬성하였으나, 종로구는 예산배정 계획의 미비, 자치구 간 경계에 위치한 청계광장 관할구의 불명확함을 지적하였음.

※ 청계광장은 종로구와 중구 간의 협의에 따라 중구가 관할하기로 결정되었음.

- 하지만,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는 사무위임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<sup>2)</sup>, 사무위임에 따른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액일지라도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## 다.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분류

- 개정안은 자치구에 대한 위임사무 중 2021년 6월에 실시된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업무분장 사항이 조정된 것을 반영하였음.
- 지난 조직개편에서 ‘택시물류과’는 ‘택시정책과’로 명칭을 바꾸면서 물류행정에 관한 사무를 신설된 ‘물류정책과’로 이관하였고, 개정안은 화물차 관련 사무의 추가 이관을 반영해 주관 부서를 ‘택시정책과’에서 ‘물류정책과’로 변경하였음.
  - 변경되는 사무는 ‘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·임대허가·임대자가용 화물차 반환신고·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’, ‘화물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및 게시 등’, ‘화물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·허가증 교부 및 게시’ 등임.

---

2)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또한, ‘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’, ‘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’의 주관부서를 ‘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’에서 ‘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’, ‘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’에서 같은 국 ‘물순환정책과’로 각각 변경하였음.

**<신규 조문대비표>**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]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				[별표]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계획국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도시계획국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계 획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제9 조제5항	구청장	<b>&lt; 삭 제 &gt;</b>			
<b>&lt; 신 설 &gt;</b>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발전본부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활 성화과	1.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	○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5 항	구청장	<b>&lt; 삭 제 &gt;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물순환안전국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물순환안전국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물재생 계획과	1. (생 략) 2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 23조에 따른 수계 영향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(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호)	구청장	물재생 계획과	1. (현행과 같음)		
<b>&lt; 삭 제 &gt;</b>				<b>&lt; 삭 제 &gt;</b>			

현행				개정안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<u>&lt; 신 설 &gt;</u>				물순환 정책과	1.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 음의 사무  가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 23조에 따른 수계영향 권별 오염원 조사	○「물환경보전법」 제23조	구청장

-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은 자치구 위임사항에 변동이 없어 내용상으로 문제는 없으나, 조직 개편이 작년 6월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후속 입법 조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.
- 조직 개편 변경사항을 포함해 제출한(2021.8)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에서 물류사무의 주관부서 변경사항(택시물류과→물류정책과)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바, 후속 입법조치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성만	2180-8055